

1979년 한국 신군부의 12·12쿠데타와 미국의 관망정책

신현익** 충남대학교

오영달** 충남대학교

논문 요약

미국 카터행정부는 12·12군사쿠데타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의 미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 내 국수적 민족주의적 저항과 한국민의 제2의 이란화 가능성을 염려하여 ‘불개입 자세’를 취했다. 미국은 이 쿠데타에 조성된 사태의 역전을 강하게 시도할 만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국의 내부적 군권쟁탈 문제가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하여 신군부세력을 군의 실권세력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군부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 정권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미적 정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핵심이익인 안보·경제적 이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불개입적 ‘관망(wait and see)’정책을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불관여정책, 즉 ‘신중한 불개입’ ‘관망’정책은 신군부 병력이 특별한 저항 없이 쿠데타 상황을 종료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신군부에 대한 뚜렷한 세력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망 정책은 결국 강자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를 지향했으며 또한 ‘대세편승적 승자승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안보·안정’적인 기존 정책노선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12·12쿠데타, 신군부, 군권쟁탈, 불개입적 관망정책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어서 연속적인 사태들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서 같은 해 12월 12일에 발생한 소위 12·12신군부 쿠데타는 한국 현대정치사 그리고 한미외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1945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한국 전쟁을 치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밀접한 정치, 외교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의 입장과 태도는 12·12쿠데타 발생 시에도 한국 국내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12·12쿠데타의 발생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대북 경계태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상정해볼 수 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특별하게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심이 있던 가운데 미국 여론은 한국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비등하기도 했다. 한국의 제 정치·사회 세력들의 민주화 열기 또한 최고조에 이르던 때에 한국의 안보상황과 민주화 두 가지 과제를 수렴, 조화시켜 성공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하나의 난제였음이 분명하다. 한국은 분단 이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겪고, 이후 남북 간의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군(軍)의 비대 현상은 점차 심해졌고 위정자들은 남북 간의 대치상태를 정치적으로 역이용하여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기도 하였다.

미국이 12·12쿠데타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취한 입장과 태도는 제 5공화국 성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미간의 중요한 외교적 의제가 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한국 국내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재야운동권에서는 미국이 신군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출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이 보여준 ‘기다리며 지켜보는(wait and see)’ 사태 관망적 불개입 자세는 12·12사태 전개 전반을 통해 나타난 사실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2·12쿠데타

발생 당시 미국이 한국의 자유민주화 필요성과 남북대치의 긴장관계라는 양면적인 사태전개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를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박 대통령 암살사건이 있었던 직후, 유동적이었던 한국 내 정치·사회적 제 상황을 검토한다. 자유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대두 그리고 군(軍) 내부의 세력화 움직임과 상호간 알력, 그리고 미국의 이에 대한 입장과 자세를 논의한다. 둘째, 12·12쿠데타가 발생하여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은 어떤 자세로 대처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게 된다. 물론, 역외자인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민감도는 한국민들보다는 훨씬 약한 것이었겠지만, 카터 행정부의 대한정책 기조, 즉 동북아 안보에 기초한 지정학적 이해를 고려에 넣는 거시적 안목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 미 당국은 한국 군부 내에서 모색되고 있던 역쿠데타 모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역쿠데타 세력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의 또 다른 군벌세력이 아니었던가 하는 점에서 군부내 가장 영향력이 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딜레마 측면을 고찰할 것이다. 넷째,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은 객관적 심판관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치상태와 자신들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군 세력의 등장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군부에 대한 목인이 그들의 최종 선택이었음을 분석, 밝히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제반 측면들과 더불어, 미국은 당시 겪고 있던 이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제2 이란화를 염려한 면도 고려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복잡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된 12·12쿠데타를 둘러싼 한국 내 제반 조건과 상황 그리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미국의 12·12쿠데타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기초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에 더하여 12·12쿠데타의 전후시기에 서울의 주한 미국대사관과 워싱턴의 미 국무성 간에 오고 간 전문들(電文: telegrams)

을 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 FOIA)에 따라 공개된 전문을 분석한 결과, 1972년 10월 17일에서 1998년 3월 19일까지 오고 간 공개된 전문 횡수는 305개월 간 총 1679개 문건이었다. 이중 1979년 10월 1일에서 1981년 1월 30일까지 15개월 동안에 오고 간 전문의 횡수는 1067건이었다. 15개월의 기간이 305개월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이나, 전문 횡수에 있어서는 약 64%에 해당되어 12·12쿠데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 및 윌리엄 글라이스틴(William Gleysteen) 주한 미국대사의 증가된 업무량과 그의 확대된 영향력을 아울러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외에도 본 논문은 당시 미국에서 한국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던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와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기사들을 참고했고, 국내에서는 주로 『동아일보』의 기사를 참고하였다.

II. 박정희 서거 직후 한국사회의 이행 열기와 미국의 관망 입장

1. 한국사회의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열기

박 대통령 하의 유신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여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재야 및 많은 한국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보수적 군부 및 관료체제의 현상유지적인 성향과 일정한 충돌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충돌은 즉각적인 민주화 실현을 위한 제반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분명한 이유 없이 연기되는 등 불명확한 정치일정으로 인해 더욱 가시화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 사후 한국 내에서 이러한 민주화 실현이라는 혁신적 움직임과 보수반동으로의 회귀라는 움직임이 상호 조정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힘을 갖춘 군부의 향방이 정국전개의 핵으로 부상하였다. 물론, 군부도 박 대통령을 추종하는 보수적 진영과 최규하 문민정권을 지원하면서 단계적 민주화 실현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방하는 진영으로 일정한 양분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보수와

혁신으로 단순화 할 수 없는 군 내부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양분된 군 내부의 양대 축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온건적인 입장의 단계적 민주화 실현을 추구하던 세력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하고 박 대통령을 추종하던 ‘하나회’ 중심의 보수적 소장장성 세력들이었다. 이러한 양대 군 세력은 박 대통령 사후에 조성된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군권 및 정국주도권을 두고 충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지닌 유일한 조직들이었다. 따라서 이 양 군 세력이 명료하지 않은 정치일정의 정국혼란 상황에서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은 현실적으로 컸고 그 결과는 전두환 신군부세력에 의한 12·12군사쿠데타로 현실화 되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 축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참모총장 공관에서 박대통령 살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연행한 것을 기점으로 촉발된 이 군부쿠데타는 이후 한국 정국을 급속히 냉각시키면서 그 방향을 급반전시켰다.

전두환 신군부세력에 의한 12·12군사쿠데타가 발생하기 직전 미국의 한국 정황에 대한 인식은 우선 한국의 정치일정과 관련이 있었다. 미국은 이 당시 한국 정국의 혼미는 정치일정 문제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정치일정의 더딘 속도에 대한 불만은 김대중과 김종필 등 제도권 지도부에서도 터져 나왔지만, 재야권과 학생 운동권에서는 더욱 강하게 표출됐다. 미국은 이러한 정치상황의 전개 양상을 정치양극화의 조짐으로 파악했다.¹⁾

12·12사태를 즈음한 미국의 한국 국내 정국 인식에서의 최대 초점은 최 대통령이 헌법 개정 절차의 완결, 즉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기간’과 관련하여 확실한 정치일정을 제시하는가의 문제에 맞추어져 있었다. 미국은 이 점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견해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글라이스틴(William H. Gleysteen) 주한 미 대사는 신현확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1년의 기간’이 적절하다는 비공식 입장을 개진했다.²⁾ 미국은

1)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791207, Immediate, Subject: Politic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Priority, Subject: Weekly Status Report - Korea.

박 대통령 사후 한국의 정정이 안정을 되찾고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으로 이행되기 위한 합리적 기간을 1년 정도로 보았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시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도 의견을 같이했다³⁾ 야당은 당시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이하 통주)’를 통한 대통령 선출을 반대했다.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유신헌법의 적용은 정부에 엄청난 임의적 권력을 부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즉각적 헌법 개정과 새 헌법에 기초한 총·대선 실시를 주장했다.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는 80년 여름 초까지 완전한 헌법 개정과 자유선거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재야 급진 반정부세력과 운동권 학생들은 최규하 과도정부에 대하여 정치일정표 제시를 강하게 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반정부 시위는 군부와 재계로 하여금 최규하 정부에 대하여 정치·경제적 안정의 필요성을 더욱 압박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들 반정부 세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일련의 이러한 악순환이 YWCA 주도의 기독교 저항집회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김종필 총재의 과도대통령 출마에 대한 반대분위기의 고조도 반정부시위의 촉발에 한몫을 했다.⁴⁾ 군부, 야권, 재야 및 재계 등 각 분야로부터 정치일정에 대한 각각의 요구가 혼재하는 가운데 최규하 과도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국은 국민들의 호의와 기다림으로부터 분노의 폭발로 전환되고 있었다.

2)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NODIS 791218, Subject: My Meeting with Prime Minister (인쇄불량으로 확인 불가) December (인쇄불량으로 확인 불가).

3) 『동아일보』 1979/12/21.

4) *The New York Times*, Nov. 19, 1979 :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군부로부터 출마결정의 철회를 강요받았다.

2. 미국 정부의 신중한 불개입 정책

이러한 정국 혼란에 즈음하여 글라이스틴 대사는 1979년 11월 30일 정승화 계엄사령관과 회동을 가진 후, 한국정부가 긴급조치 9호 해제나 계엄령 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또한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 정치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최규하 과도정부의 명확한 정치일정 미제시로 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국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나름대로 정국해법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질서를 중시하는 군의 보수적 성향과 재야의 급진성이 충돌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명확한 정치일정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하면서도 시국해법으로서 강경대응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⁵⁾

당시 미국은 이러한 혼미한 정국에 대해 이미 일면 쿠데타를 예견하고 있었는데 특히 재야급진세력, 그 중에서도 기독교 반정부세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당시 세계적 관심과 기대를 모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전망은 1979년 11월 27일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정치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던 계엄정국 하에서 재야세력 및 운동권 세력들은 최규하 과도정부가 정치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항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일환으로 재야권은 윤보선 전 대통령, 김대중 및 재야인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YWCA에서 위장결혼식 형식으로 반정부 집회를 강행하였다. 이 집회를 통해 그들은 최규하 문민정권의 불투명한 정치일정에 대해 항의하였고, 미국은 이 사건이 한국의 안정적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⁶⁾ 이 사건은 최

5)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NODIS, 791203, Subject: Korea Focus; Meeting with Martial Law Administrator Chung November 30.

6) *The New York Times*, Dec. 4, 1979.

규하 과도정부의 명확한 정치일정 미제시에 대하여 재야급진세력이 불만을 극적으로 표출한 사건이었다. 한편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당시 가택연금 중인 김대중에 대해서 적대적 발언을 함으로써 군 중립에 대한 회의감을 부추겼다.⁷⁾ 즉 교회나 반정부 지도자들로 하여금 ‘군 중립맹세는 가장(假裝)’이라는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발언으로 미국이 우려한 바와 같이 정국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경색되어갔다. 이 혼란의 와중에서 최규하는 1979년 12월 6일 “통주”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당시 미국은 이러한 일련의 한국 국내 정정과 관련하여 우려스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의 정국을 유동적이며 복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낙관적으로 보고 싶으나 사태발전이 심히 우려스런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국 정부에 의한 언론자유와 시위자들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갖고 주시했다. 한국의 정치발전 과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글라이스틴 대사의 의견을 구하는 밴스(Cyrus Vance) 당시 미 국무장관의 전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⁸⁾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평가의 바탕 위에서도 한국의 제(諸) 정치세력 중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면서 일종의 불개입 입장을 고수했다. 즉 어느 세력에게도 힘을 실어주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김대중에 관한 비평적 발언 후, 밴스 국무장관은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김대중이 관련된 모든 이들에 의해 보다 정상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는 또한 군부에 의해서도 보다 온건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을 보냈다.⁹⁾ 그는 김대중이 억압받고 탄압받았기 때문에 그 반대행동이 보다 선동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가 선동적이면 정국안정에 도움이 안 되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7) *Ibid.*

8)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791204, Subject: Politic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9)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791204, NODIS, Subject: Korea Focus - Kim Tae-chung.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10·26사태 직후의 한국 정국과 관련하여 야권·정부·군부 사이에서 한걸음 물러나 지켜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어느 세력에게도 뚜렷한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습이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상황을 한국의 정치발전 전개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하며, 어떤 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불개입하는 관망의 자세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을 ‘신중’ ‘중립’ ‘내정 불개입’으로 합리화 했던 것이다.

Ⅲ. 12·12쿠데타 성공과 미국의 대세편승

1. 군사쿠데타 발생과 미국의 불명확한 입장

12·12군사쿠데타 발생 직후 미국에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였다.¹⁰⁾ 이 점과 관련하여 글라이스틴 대사는 ‘12·12사태를 규정짓는데 신경 쓸 필요’라는 제목의 전문에서 “실질적 쿠데타(명목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쿠데타)”로 조심스럽게 묘사했다. 다른 한편, 사건의 정확한 형태가 어떠했든 간에 ‘이것은 고전적 쿠데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하며, 그 이유로 기존 정부 구조가 기술적으로는 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¹¹⁾ 미국의 12·12군사쿠데타에 대한 성격 규정문제는 미국의 한국군부에 대한 인식 및 대응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었다. 12·12군사쿠데타를 군 내부적인 문제로 돌려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

10)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Washdc, Immediate, 791214, Subject: Need for Care in Characterizing December 12 Incident.

11)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USDEL Secretaty Flash, White House Flash 0000, Amembassy Seoul Flash, 791212, Subject: Military Power Play in South Korea.

해야 한다는 국무성의 입장은 이러한 대응원칙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이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여 한국군 내부의 어떤 특정세력을 곤란하게 만들어 사태를 더 경색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불개입원칙이 깨어질 수도 있었다. 즉, 경솔하게 쿠데타로 규정짓는 것은 쿠데타 세력의 반발을 초래하고, 그 반발은 반미로 이어져 미국의 한국국내사태 불개입 원칙이 깨어지고 연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10·26직후부터 한국 정정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면 서도 어느 세력에게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 불개입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12·12군사쿠데타로 인해 예기치 않게 개입되는 것도 원치 않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몹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과 쿠데타가 조용히 해결되어 서로의 체면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양측을 자극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사태악화를 막으려 했다. 이 시점에서도 미국은 역시 ‘지켜본다(wait and see)’는 입장이었다. 그것이 쿠데타 군(軍)을 자극하여 민족적 국수주의나 반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물론 당시 전개되고 있던 이란사태가 영향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글라이스틴 대사는 12월 13일 워싱턴으로 보내는 장문의 전문에서 이 사태 및 신군부와 관련한 추가의 몇 가지 인식 및 반응을 피력하였다.¹²⁾ 우선, 미국은 신군부를 반공·친미를 표방하고 질서정연한 자유화를 추구할 결의에 차있는 것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신군부세력을 긍정적 시선으로 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미국은 신군부의 전격적인 권력장악의 속도에 놀랐으며, 역쿠데타 발생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군의 단결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사태 발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셋째, 한미연합사 체계를 무시한 점에 대해 몹시 자존심이 상한 반응을 보였다. 계산에 의해서이든 아니든, 미국 정부는 신군부가 자신들의 지위를 무시한 데 대해 불쾌한

12)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213, Subject: Younger ROK Officers Grab Power Positions.

기색을 보였다. 따라서 군사·경제적인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 보이면서 사태를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와 연결하여 파악하는 자세를 보였다.¹³⁾ 넷째, 표면적으로는 민간정부에 대한 지지와 한미관계 훼손 가능성 및 항의를 표시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신군부와 등을 돌려 그들과 거리를 두는 데 따르는 혼란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였다.¹⁴⁾

2. 미국의 쿠데타 사전예방 가능성 논란

1) 한미 군 지휘부의 소극적 대처

미국은 사전에 12·12사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 위컴(John A. Wickham) 당시 주한 유엔 사령관은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 그리고 그 형태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거사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상태였다(『신동아』 1993, 301~319).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신군부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미간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사전에 쿠데타 계획을 인지했으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12·12사태 당시 합참 본부장이었던 문흥구 예비역 중장은 미국의 12·12군사쿠데타 사전 인지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즉, 1979년 11월 중순 경 위컴 사령관은 한국의 육사 출신 장성들이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가 담긴 한 장의 메모를 한국군 측에 건네고 내사 지시를 내렸다(『신동아』 1993, 301-319). 해당 문건을 접수한 문장군은 즉시 노재현 국방장관을 방문해 이에 대해 보고했다. 문 장군이

13) 뉴욕 타임즈는 1979년 12월 16일자에서 “...전 장군과 그 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지렛대를 가져갈 수 있기 위해 이 전반적인 사태를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미국이 12·12사태를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14)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213, ibid.

노 장관을 방문했을 당시 노 장관은 자신도 이미 메모를 받았다는 점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노 장관에 따르면 전(全) 사령관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노 장관으로서는 합수본부장인 전(全) 사령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전 사령관은 ‘당연히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문 예비역 장군은 증언했던 것이다. 당시 문 장군은 노 장관의 자신 있는 태도에 일단 물러났으며, 정보국장 김용금 장군에게 확인한 결과 그도 이미 미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2세 교포들로부터 그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문 장군은 재차 김 장군을 대동하고 노 장관을 방문하여 상당한 근거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볼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 노 장관은 대노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음을 과격한 몸짓 반응과 함께 강력히 부정했었다고 문 예비역장군은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군부의 쿠데타 모의가 미국의 정보망에 포착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한 미 사령관으로부터 이러한 정보가 메모를 통해 한국군 지휘부에 전달되었다는 사실 등은 문홍구 전 합참본부장의 국정조사 답변서에서 다시 한번 밝혀졌다(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997, 43). 그는 또한 정승화 참모총장 역시 김진기 헌병감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첩보를 전해 들었으나 조사 후 아무 일도 없어서 덮어버렸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 당시 문홍구 장군은 평소 잘 알고 있던 미8군 정보장교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12·12사태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재현 국방장관이나 정승화 참모총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통해 쿠데타 모의 정보를 제공받았어야 했는데, 전 사령관이 그 당사자였으므로 직속상관들인 이들은 더 이상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을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과 관련하여 문홍구 장군 자신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위کم 사령관은 사전모의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지만 한국군 수뇌부에 의해 유아무야 넘어갔다고 보아야 하며, 워낙 한국군 수뇌부의 입장이 완강했으므로 특별히 대처하

지 못한 상황적 맥락이 엿보이고 있다. 위کم 사령관 자신도 이 정보를 이형근 퇴역 장성으로부터 듣고서 노 장관에게 알려주었으나 노 장관이 이 정보는 군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Wickham 1999, 51). 위کم 사령관은 유병현 당시 합참부의장에게도 알려주었으나 반신반의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위کم 사령관은 노 장관과 유 대장이 자신의 정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두 사람의 판단착오라고 평가했다 (Wickham 1999, 51).

2) 신군부의 정보 독점·교란·차단과 명령체계의 혼란

10·26 박대통령 살해사건 이후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장 직책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주어졌던 사실에 대해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 대사는 이 임명 결정이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회고록에서 술회하고 있다. 이 직책을 다른 사람이 맡았다면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을지 모른다고 아쉬워했다(Gleysteen 1999, 56-57). 이러한 임명의 결과로, 전두환 합수부장은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국가 수사기관의 실질적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전두환 합수부장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점을 이용해 중앙정보부를 와해시키는 데 최 역점을 두었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수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모든 정보계통을 독점하여 유리한 상황을 선점한 위치에서 12·12군사쿠데타에 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정보 독점과 교란 및 차단을 통해 지휘 명령체계상의 이점을 누린 점은 쿠데타 성공의 한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점은 사전 거사모의에 대한 보안유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신군부가 이러한 정보체계상의 이점을 누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한 미 사령부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주한 미 사령부가 노태우 9사단장의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가 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의문은 신군부가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정보에 대해 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997, 73-74).

이러한 정보 독점이나 교란이 12·12군사쿠데타 상황이나 한국군 정식지휘계통의 진압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997, 73-74).

첫째, 육군헌병감 김진기 준장이 전화상으로 대통령 면접 중인 전두환 합수부장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를 총리공관 특별 경호대장 구정길 중령에게 타진한 사실이 신군부 측에 의해 도청되어 그들에 의한 대통령 공관 장악 결과로 나타났었다. 둘째, 육군수뇌부의 B-2 병커 포기와 수경사로의 지휘소 이동 내용을 담은 전화통화가 도청되어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무력화 조짐이 노출된 반면 신군부측 기세는 더욱 고조되었다. 셋째, 신군부는 제9공수여단 출동준비와 출동지시의 전화내용을 도청함으로써 사전에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었으며, 이후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 정식지휘계통에 의한 진압작전을 실패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넷째, 신군부는 참모차장, 제3군사령관, 수경사령관 및 특전사령관 등의 방패부대 출동과 관련한 전화내용을 도청했고, 이는 신군부측이 출동저지를 위한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을 용이케 해줬을 뿐만 아니라 정식 지휘계통의 와해를 재촉한 결과로 작용했다. 다섯째, 기타 주요 참모들에 의한 반란진압작전의 통화내용은 하나같이 신군부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상대적으로 정식 지휘계통에게는 내부분열 내지는 와해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당시 글라이스틴 대사는 신군부에 의한 작전 정보와 통신의 고의적인 봉쇄가 미국이 자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제한했던 점을 고백하고 있다(Gleysteen, 1999, 77). 그러나 한국군 수뇌부와 주한 미 사령부 최고위층들이 9사단과 같은 대규모 부대의 이동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군의 정보수집능력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게 하며, 미국의 불개입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3) 개인적 연계와 정보차단

12·12군사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사전예방 가능성 및 연루 여부 쟁점과 관련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 Combined Forces Command¹⁵) (CFC) 지휘관 유진 포레스터(Eugene Forrester) 중장은 이 사태를 목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کم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이 가능성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암시하고 있다(Wickham 1999, 81, 181~182). 그의 표현을 빌리면, 포레스터 장군은 한국 육군의 신진세력들은 거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지지한다고 보았고, 12·12 사태 이후에도 군 내부에는 전혀 동요가 없다고 파악했다(Wickham 1999, 181: 위کم은 국방대학 동기인 그가 한미연합사에서 함께한 한 오찬 석상에서 전두환 및 그의 추종자들과 왜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느냐고 힐난한 사실에 대해 아연했다고 고백한다). 이 같은 점을 통해 포레스터 장군은 이미 전두환 측 신군부세력을 한국 육군 내부의 대세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한국군 세력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대한 암묵적 지원세력으로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 위کم 사령관이 포레스터 중장을 군인으로서 애국심이 부족한 인사로 언급하며 개인적인 실망감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점도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Wickham 1999, 181-182). 이 점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을 바라보는 미 고위 장성들 간에 일정한 시각차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부분으로서, 포레스터 장군은 현실적으로 신군부를 한국 군부세력의 대세로 받아들였다고 보여지며, 위کم 사령관은 당위적 명분을 내세우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Wickham 1999, 182). 위کم 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처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두환을 지지한 포레스터의 행동을 비애국적인 처사로 보았고, 자신도 개인적으로 본국 정책과 배치되는 자세로 전두환을 지지했다면 미국정책결정자들의 입장을 취약하게 만들고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며 전두환에게 이용당했을 것으로 회

15)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028, Subject: Initial Reflections on Post-Park Chung Hee Situation in Korea.

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표현은 ‘전두환 세력에 대한 지지’로만 암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이지는 않다.

이 밖에 신군부가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는 이점(利點)으로 작용했고 나아가 신군부와 미국이 연계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전두환 합수부장과 밥 브루스터 당시 미 CIA 한국지부장의 친밀한 개인관계였다(Wickham 1999, 33). 김윤호 육군보병학교 교장을 통해 더욱 관계가 원활해진 양인의 관계가 한층 더 이러한 오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Wickham 1999, 67). 12·12군사쿠데타 이틀 후인 12월 14일 밥 브루스터 지부장의 주선으로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나게 되었는데, 밥 브루스터 지부장은 전 보안사령관이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에서 이 모든 일을 주도했음을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확인시켜 주었다고 위컴 사령관은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다 (Wickham 1999, 73. 참고로, 밥 브루스터 지부장은 그 당시 신병으로 사망).

전두환·밥 부르스터와 김윤호·브루스터를 매개로 한 위컴 사령관 및 미국 지도부 설득은 아주 주요하였다. 즉, 위컴 사령관은 “전 보안사령관이 장담한대로 쿠데타 발발경위와 그 배경에 대한 김 장군의 설명은 그의 오랜 친구인 밥 브루스터를 포함한 미국측 지인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Wickham 1999, 67). 위컴 사령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12·12군사쿠데타 실행 직전의 한 작전회의에서 신군부측 장성들은 김윤호 장군을 통하여 미국 측을 설득하기로 결정했었다. 또 신군부세력에 의해 서울북부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미군사령관 유진 포레스터 중장과의 연계 시도가 있었음도 위컴 사령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Wickham 1999, 56-57). 12·12군사쿠데타 실행 이전에 이미 신군부의 전두환 측과 한미연합사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Wickham 1999, 81).

이러한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이 12·12군사쿠데타를 사전에 인지한 점은 사실이였으나 미국이 직접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고 노재현 장관이나 유병현 합참부의장에게 간접적으로 모의정보를 전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런 점은 미국이 신군부를 지지한 의

혹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나온 배경이 될 수 있었다(이삼성 1993).

4) 사태 당일의 한국군지휘부 이동과 한미공조 가능성 상실

12·12사태 당일 밤, 신변안전이 보장된 용산 미군병거에서 노 장관과 김 합참의장이 지휘부를 확보하고 모든 미군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군을 지휘·통제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휘부의 적극적인 실시간 현장대응이 있었다면 미군지휘부도 방관과 불개입 태도를 절대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한·미간 실시간 작전회의가 진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뿌리치고 노 장관과 김 합참의장이 국방부로 옮겨간 이유에는 김용휴 당시 국방차관의 현혹행위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두환 당시 합수부장의 변방사령관으로의 전출사실을 알려준 장본인으로도 알려진 김 차관은(권영기 1989, 290-301) 진작부터 전두환 신군부세력과 연계된 인물이었음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¹⁶⁾ 김 차관의 책임 부분에 대한 논거는 용산 미군사령부 지하병거에 김 합참의장과 함께 피신해 있었던 노 장관을 국방부로 끌어들이 양인이 박희도 1공수여단장에 의해 체포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کم 사령관의 증언이 있다(Wickham 1999, 106).

이 증언대로라면 이 순간이 12·12사태의 최대 정점에 이른 반전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미간 공조가능성이 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당시 위کم 사령관 입장으로 볼 때는 노 장관을 위시한 한국군 수뇌부의 안전문제에 큰 배려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의 차가 돌아오는 길에 한국군 간 교전으로 인한 총탄에 맞아 탄흔이 남아 있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증언으로 볼 때, 김 차관은 노 장관 등 한국군 지휘부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의도성이 있는 유인요인을 배경으로 그들을 국방부로 불러들여 사태를 그르친 장본인이며, 따라서

16)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으로는, (『실록 12·12와 5·18』, 190; 『월간조선』의 윗글; “12·12와 5·18 재수사 검찰수사기록,” (『신동아』 1996, 672, 680; Wickham 1999, 61-62) 등을 들 수 있다.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은연중 밝히고 있다. 위کم 사령관의 이러한 암시와는 별도로 김 차관의 당일 행적에 대해 ‘현혹’에 무게를 두고 묘사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신군부와의 연계성과 함께 의도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 시점에서 김 차관은 박희도 여단장이 이끄는 제1공수여단이 한강을 넘어 이미 국방부와 육본을 접수하려 오고 있다는 사실을 30경비단에 모여 있는 합수부 신군부세력과의 전화통화로 사전에 알고 있었다(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997, 189-190). 또 국방부에 도착한 박 여단장에게 노 장관이 분명 국방부 청사 내에 있다는 행적 상황까지 알려준 사실로 보아도 노 장관을 비롯한 한국지휘부의 국방부로의 이동은 김 차관의 의도성에 휘말린 문제라고 평가된다(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997, 189-190).

역사에는 ‘만약(if)은 없다고 하지만 만일 그날 밤 한국지휘부가 미군 병커에만 머물렀다면 12·12군사쿠데타는 진압되었을 수도 있었고, 한·미간 제반 모든 복잡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12·12사태를 처리하는 진정한 모습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 속에서 12·12쿠데타 실행 당일 밤 한국과 미국 양측은 쿠데타 대처에 있어서 상호 공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결정적 기회를 놓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미국의 불개입이 갖는 정책적 함의

미국이 12·12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연루설의 부담까지 안게 된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당일 밤 미군병커에서 노재현 국방장관과 함께 한 위کم 사령관이 새벽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한 결정이다. 이러한 언급은 미국의 총체적인 대한정책을 시사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즉 기다려서 사태의 추이를 보고 대세를 따르려는 미국의 태도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두환 장군의 보안사령관 직책 그리고 나아가서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직책의 이점(利點)으로부터 연유된 정보의 독점이 미국에게

는 정보의 차단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그의 합수부장 직책으로의 임명이 박 살해사건 때문이며 그 임명은 결국 12·12군사쿠데타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살해사건은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는 명제가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셋째, 신군부세력은 전두환 합수부장의 직책상의 이점으로부터 연유된 조건을 배경으로 12·12군사쿠데타 이전과 이후에 당시 미국지도부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지도부와와의 사적·공적 밀착 및 연계는 12·12군사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반응을 부정일변도로 흐르지 않게 하고, 쿠데타 정보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가 둔감해지거나 희석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적극적 묵인'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12·12사태 당일 밤, 새벽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위컴 식 미국의 대응태도는 결국 쿠데타의 성공을 도와준 것이나 다름없었으며(이삼성, 1993), 한국으로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두환의 신군부세력의 부상(浮上)이라는 결과를 감내해야만 했다. 이 당시 미국은 한국의 군 장악권이 한국의 어느 군 세력에게 있느냐의 문제를 그리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¹⁷⁾ 미국에게 중요했던 것은 12·12군사쿠데타가 합법적 절차에 의한 군 지휘권 이양이 아니라는 점이었고, 군의 단결성 저해라는 측면이었다. 미국은 신군부의 불법적 군권찬탈 문제보다는 군의 응집력 및 단결문제와 군의 민간적 절차에 대한 존중 문제 등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물론, 미국의 그러한 입장은 이해의 여지가 있다. 주한미군과 군속들 및 그 가족들의 안위와 한국에서의 경제·안보적 이익을 모두 감수할 만큼 미국은 12·12군사쿠데타의 유혈진압에 관심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의 사활이 걸린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한국의 이익이라는 일방적 잣대로 미국을 재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즉, 한·미간에는 서로 같을 수 없는 시각의 괴리가 존재하였다. 민주화나 인권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하

17)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Niact, Immediate, NODIS, 791218, Subject: Korea Focus; General Thoughts.

여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과도한 기대와 책임을 요구했을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정책수행에 좀 더 도움을 주는 세력, 또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추구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좀 더 협조적인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는 측면도 진지하게 고려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세력은 바로 상호 경쟁 속의 행위자들 중 최강자, 즉 승자라고 할 수 있었다. 기존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세계전략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기본조건이 전제되면, 미국은 한국에서의 안보·경제적 이익과 인권 및 민주화 실현이라는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 즉 미국의 외교정책의 이중적 딜레마가 외현화 될 때,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이익이 우선시되었음을 12·12사태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다 (이삼성 1993).

IV. 한국 군부 내의 역쿠데타 시도와 미국의 거부

1. 미국의 상황인식과 신군부 부상의 목인

12·12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전두환 합수부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군권을 장악한 뒤, 한국군 내의 일부 세력들 사이에서 역쿠데타 음모가 있었다. 이 사실은 글라이스틴 대사나 존 위컴 사령관의 증언에서 여러 번 확인되고 있다.¹⁸⁾ 당시 주한 미군 최고사령관이었던 존 위컴은 자신이 이러한 일부 한국군 세력들에 의한 역쿠데타 제의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첫째, 역쿠데타 그룹이 미국의 지지로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 둘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악마’에 대신해 알지 못하는 ‘악마’를 끌어들이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셋째, 한국군끼리의 충돌로 이어져 그로 인한 국내 소요가 북한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Wickham 1999, 180).

이러한 이유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위컴으로서 당연히 염두에

18) 양인의 회고록 중 독립된 장에서 여러 차례 증언되고 있다.

뒤야 할 기본적 고려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이외에 당시 한반도 여건과 한미관계, 또 월남패망 이후 동아시아의 분위기 등을 감안한다면 미국 측 입장에서 역쿠데타 기도에 대한 불개입 이유는 복합적일 수 있다. 미국의 12·12군사쿠데타 역전 시도는 기존의 한국 국내정국의 안정에 대해 혼란을 유발하는 동인이 되어 한반도 안정유지 및 공산화 저지라는 자신들의 정책에 배치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12·12군사쿠데타 역전 시도와 관련하여 불관여정책을 유지해 나갔다.¹⁹⁾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실의 하나는 글라이스틴 대사가 한국의 최모 교수에게 한 응답이었다. 즉, 그 교수는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전두환의 행동을 무효화하고 그를 축출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그저 어느 사람이든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줄 황금의 기회라는 지적에 대하여 글라이스틴 대사가 답하기를 "당신의 이상과 좌절을 이해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음. 식민지 통치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음"이라고 했던 것이다.²⁰⁾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한계를 잘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12·12군사쿠데타 직후 미 정부와 서울의 미 대사관은 글라이스틴 대사가 '권력탈취행위'라고 표현한 이 사태를 무효화하려는 노력을 일절 시도하지 않았다. 위کم 주한 미 사령관은 전두환 합수부장의 측근인 문형태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사태를 역전시키지 않겠다는 확인까지 해 주었다. 그 대신, 미국은 전두환 합수부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권력을 장악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전두환 합수부장은 미국의 충고를 간단히 무시하고 이내 권력을 손에 잡게 되었다.

19) 미국은 김용식 주미대사가 홀부룩 국무성 아태담당차관보를 방문했을 때, 미국정부는 12·12사태에 대한 한국정부 해석을 공개적으로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주었다.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Immediate, NODIS, 791219, Subject: Korea Focus - Amb. Kim (blank)

20)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791219, Subject: Telegram from Professor Choi and Response.

당시 미국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당시 오고 간 여러 전문가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즉각적 행동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주로 설득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신군부의 정권장악 행위가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하여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남한의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후 전두환 합수부장과 글라이스틴 대사의 12·12사태와 관련한 회동에서 전(全) 합수부장은 이 쟁점에 대해 경청은 했으나 설득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berdorfer 1997, 122~123). 미국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북한위협 요인을 거론하며 12·12사태와 관련하여 신군부에 압력을 가한 점에 대해 신군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주한미군철수를 계획했던 미국의 입장으로 미루어 북한 위협이 임박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위협문제는 자신들이 미국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믿었다. 사실 미국 스스로 철군계획을 세웠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실제로 미국이 북한 위협에 대해 커다란 위기감을 느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Oberdorfer 1997, 123).

미국이 12·12사태가 경제성장을 위협한다며 신군부에 압력을 가하려 했던 것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남한경제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²¹⁾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전 한국국민들을 담보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윤을 추구하는 미국업계 인사들 중 과연 누가 남한의 지도자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지니고 있었는지 또한 불분명했다(Oberdorfer 1997,

21) 우리는 경제쟁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능한 관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은 최근년에 박 대통령을 그렇게 결정적으로 도와준 것과 같은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1859, NODIS, Subject: Initial Reflections on Post-Park Chung Hee Situation in Korea.

123). 또한 이들 신군부 장성들은 1979년 11월 4일부터 미국의 외교관들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인질로 억류된 상황에서 한국의 신군부 세력을 지나치게 자극해 자칫 ‘제2의 이란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서 외교적 운신폭이 극히 제한돼 있음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증대된 영향력이라고 느끼는 부분과 자신들의 영향력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영향력의 한계문제는 불개입으로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았고, 영향력의 증대로 느낀 점은 신군부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²²⁾

2. 불개입 관련 미국의 이해와 한계

1) 영향력의 한계와 현실적 대선택

미국의 영향력은 근본적인 면에서 70년대 말 한미관계의 변화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문제이기도 하였다.²³⁾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 전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1979년 한국은 우리가 박정권을 헌법개혁 쪽으로 몰아붙일 수 있었던 1960년대 초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10·26살해사건 이후 당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60년대 초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미국은 12·12사태와 관련한 대응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기대와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사이에서 일정 정도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의 결과로 부상한 한국중산층의 현실 안주적인 보수성이 미국의 적극적 사태개입에 영향을 주었음을 존 위컴 당시 주한 미 사령관은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는 12·12사태 직후 자신은 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국민들이 자신들의 자유가 훼손된

22)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228, Subject: Korea Focus - Relations with ROK Military.

23)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028, Subject: Initial Reflections on Post-Park Chung Hee Situation in Korea.

것에 대해 가시적인 분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들이 의외로 수동적 태도를 보여서 놀랐다고 고백한다(Wickham 1999, 177). 그리고 그는 한국국민들이 신군부의 불법적 정치권력의 탈취와 비상계엄 실시에 따른 자신들의 자유의 상실을 받아들이는 모습, 즉 압제를 용인 내지 체념하는 태도는 놀랍고 실망스러웠으며 군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어렵게 했다고 아울러 고백한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한국인들은 기꺼이 '견디려'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미국이 이러한 자신들의 대내외적 영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취한 선택은 '대세 수용'이었다. 미국은 12·12군사쿠데타에 직면하여 사태반전을 위한 적극개입이라는 수고보다는 현실의 대세를 그대로 수용하는 용이한 선택을 했다. 즉 일단 굳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상타파의 위험 내지 수고는 감수하지 않는 적극성 결핍의 자세를 보였다.²⁴⁾ 이 점에 대해서 위کم 사령관도 직설적으로 미국의 이런 자세를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12·12사태를 한국국민들만 현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일차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현실적 안주라는 편안한 선택을 했다는 점은 우선 12·12군사쿠데타가 종료된 당일 밤 미국은 즉각적으로 신군부세력을 현실적 대세로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Wickham 1999, 67).

2) 사태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저평가

현실적으로 미국의 카터 행정부가 한국의 12·12군사쿠데타와 또 그 역쿠데타 문제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12·12사태 해결과 관련된 미국의 태도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 당시 민감한 미국이익이 개재된 전 세계적인 주요 쟁점들 가운데서 한국의 12·12군사쿠데타와 그 역쿠데타 문제가 과연 카터행정부의 우선적 해결과제

24)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ate, 791228, Subject: Second Look at December 12 Incident.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ate, 791228, Subject: Korea Focus - Relations with ROK Military.

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양국이 느끼는 중요성에는 격차가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전에 비해서는 한국을 더 높이 평가했던 것은 분명하다.²⁵⁾ 그러나 미국의 이익 수호를 위한 ‘방위(호)벽’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평가기준에서 늘 서유럽, 중동 및 일본에 버금가지는 못했다. 한국 안보가 일본안보에 필수임을 천명하는 1969년 11월 사토-닉슨 공동성명에서의 ‘한반도 강령’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하여 밴스 당시 미 국무장관도 남한의 안보·안정·복리는 일본에 핵심사안(the most vital concern)임을 밝히며, 미·일을 밀접히 묶는 공동방어 안보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Vance 1980~1981, 3-13).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역시 한국의 방위 및 이익은 일본의 방위 및 이익의 연장선에서 평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10·26살해사건 직후 이 쟁점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박 대통령 조문단 일원으로 방한한 리차드 홀부룩(Richard Holbrook) 미 아태담당차관보의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남한이 혼돈에 빠져든다면 만일의 경우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할런지 모른다고 밝혔던 것이다(Fuji Kamiya 1980, 744-753). 이 발언은 1979년 10월 9일 박 대통령 서거 직전 주일(駐日) 미 대사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가 “미국의 최전방 방위선은 일본과 필리핀”이라는 발언 직후 나온 언명이었다. 당시 맨스필드대사의 이 발언은 언론으로부터 “미국의 또 다른 애치슨 선언”이라는 추측과 함께 집중적 시선을 받았다.²⁶⁾ 이 발언은 물론 한국 측으로부터 사태파악 및 진위여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

25)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028, Subject: Initial Reflections on Post-Park Chung Hee Situation in Korea.

26) 『동아일보』, 1979/10/15 자는 미국이 한국에 지킬 이익이 있을 때까지만 주한미군을 주둔 시킬 수 있다는 주한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동(同)지(紙)는 그 전례의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의 브라운장관의 발언, 즉 “앞으로 또 30년간 주둔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유럽 미주둔군과 일본 주둔군에 대한 그러한 언급은 없으면서 한국 미주둔군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다는 점은 미국이 한국에서 지켜야 할 이익이 있을 때만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켜 외교적 쟁점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 브레진스키(Zbigniew Brezezinski)에 의한 그 입장의 부정 및 해명으로 사태가 수습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국의 대한(對韓) 인식은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즉, 한국은 미국이 언제든지 포기할 개연성이 있는 가치저평가 국가였고, 최우선의 '고(高)비중(比重)'지역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 준 것이다.

한편 당시 대선을 앞둔 미국으로서는 중동에서의 이란 인질문제, 침체되는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카터 행정부의 인기 등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예한 정치적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카터행정부는 정권말기 '레이덕'에 신경 쓰며 재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던 시점에 10·26살해사건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은 카터행정부의 세계전략 일환인 '동북아 공산화 저지' 정책에 더욱 강박감을 더해주었다. 따라서 한국의 12·12군사쿠데타와 같은 국내적 군권 헤게모니쟁탈과 관련하여 미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느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전 국민적으로 박 대통령 장기집권과 그에 따른 독재정체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경제적 성취에서 기대되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한국민들의 강한 동경이 그들에게 민주화의 쟁취 동기를 추동시키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12·12사태 추이는 한국민들의 생존과 안위에 직결된 민감한 문제였다. 유신독재체제가 가져다준 정신적 압박과 10·26살해사건이 가져다준 정신적 공황에 더해 12·12사태는 또 한 번의 정신적 외상을 덧대었다.

3) 검증된 신군부세력과 한국지도부의 지도력 부재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대한 위کم 사령관의 평가는 그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밀착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Wickham 1999, 39). 또한 신군부세력이 박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미국 측에 이미 검증되어 암묵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은 측면이 있다면, 최규하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집권 문민정권 지도부는 주한 미지도부에 의해 크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12·12군사쿠데타 발생을 전후하여 미국은 한국 지도부의 지도력을 저평가 했다. 위کم 사령관에 따르면, 12·12군사쿠데타에 직면해, 한국민과 최규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 및 사회 각계 지도층의 적극적이고도 단호한 저항의지의 결핍이 제3자의 위치에 있는 미국 지도부의 단호한 결정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Wickham 1999, 175-176). 글라이스틴 대사는 특히 최규하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자신의 대한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솔회했다(Gleysteen 1999). 글라이스틴 대사는 자신의 역할이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1) 결정적 정보 부재, 2) 최규하의 보수적이고 조심스런 성격, 3) 한국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 부재를 들고 있다. 최규하의 개인적 성격요인이 리더십 부재로 연결되고, 이러한 지도력 결핍이 한국국민들의 단결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지도부 평가는 일면 자신들의 책임 회피성, 즉 자기 합리화 의도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도 알 수 있다. 글라이스틴 대사의 이러한 평가처럼 ‘지도력 결핍’ 문제는 당시 한국의 정치적 맥락으로 볼 때 실제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박 대통령 집권 기간을 통틀어 군부를 제외한 그 어떤 세력도 체계적으로 결집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즉, 야당지도부는 이른바 ‘양김’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들의 지도력에 호응하는 반정부세력 및 운동권 학생세력 또한 응집된 영향력을 지닌 정치세력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권한대행을 떠맡던 시점에서 군부의 지지 배경이 없었다.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군부 내 개혁주의자들이 과격주의자들에 의해 거세되는 과정이 12·12쿠데타였다면(Fowler 1999, 287-288), 최규하 대통령의 지도력은 설 자리를 잃은 셈이었고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최규하 대통령의 강인한 개인적 성격으로만 극복되기에는 힘든 구조적인 배경이었다.²⁷⁾

4) 주한 미 지도부의 상황 인식

만일 주한 미국지도부가 12·12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칙론을 고수하며 신군부 세력에게 경직된 자세로 일관했다면 이들로부터 역공세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⁸⁾ 신군부세력은 실제로 미국 내 퇴역장성들을 통해 로비를 벌여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꾀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는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주한 미국지도부에 대한 고립화 전략으로 이어졌다. 이 점에 대해 위컴 사령관은 자신의 신상문제가 본국정부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었음을 염려했다(Wickham 1999, 56). 이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위컴 사령관의 자신의 위상과 관련한 상황인식이 역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동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미군지휘부가 신군부세력에 의해 현혹되거나 설득되어 그들이 병영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믿었던 측면이 미국이 적극적인 역 쿠데타를 시행하는 것을 가로막은 요인이었다.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이 군부체제를 재편성하고 난 뒤에는 정치개입에서 손을 떼고 군으로 원대 복귀하여 최규하 정권의 민주화 추진과정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려 했다. 이러한 신군부세력의 시도에 미국은 현혹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점이 12·12군사쿠데타를 역전시키고자하는 미국의 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뉴욕타임즈 1979년 12월 19일자는 잘 확인해 주고 있다.²⁹⁾

미국 여론은 신군부가 한국 내 정치적 간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27) 이점에 있어서 박원곤은, 1)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미국의 대한정책, 2) 최규하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3) 대외적인 이란 사태, 이 세 가지 요소를 미국이 12·12쿠데타에 개입하지 못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의 요소는 박 대통령 살해사건 이후 개인적·주관적 측면의 무기력이 아니고, 객관적·사회전반적 요인을 포함한 불가항력적 요소였다는 점이 부각된다(박원곤 2010, 99).

28) *The Washington Post*, Dec. 19, 1979: 미국은 신군부의 반발과 반미주의를 상당히 경계했다;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ate, 791228, Subject: Second Look at December 12 Incident.;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ate, 791228, Subject: Korea Focus - Relations with ROK Military.

29) *The New York Times*, Dec. 19, 1979.

대해 기대감을 피력했으며, 또한 사태전개에 따라서는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정치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은 제3회 검찰진술조서(1996년 1월 4일)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5·18 사건수사기록』 2005, 22). 진술로 미루어 볼 때, 12·12군사쿠데타 성공 후 쿠데타 가담 핵심인물들조차도 쿠데타가 군권장악임은 이해했으나, 정권찬탈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1995년 12월 14일·29일 양일에 진행된 노태우 당시 보안사령관의 검찰조사 진술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신동아』 1996, 664). 이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신군부세력이 12·12군사쿠데타 직후에는 아직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구체적 시나리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의 정치일정에 맞추어 가자는 것이 신군부의 기본입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권장악만으로도 만족해하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안사 보안처장 정도영도 이점에 대해서 한층 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월간조선』 1993, 354). 그들의 주장대로 정권쟁취로의 접근은 점점 권력의 중심추가 자신들의 편으로 기운 후 시도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신군부세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미국은 신군부세력에 반대하는 역쿠데타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인이 크게 희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Wickham 1999, 66).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당시 주한 미지도부의 해법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최규하 정권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천명하여 최 정권의 정통성에 힘을 실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군부실세와 가능한 공식적 접촉을 자제하고 최대한 공식채널을 통해 문민정부으로 힘을 실어주기위한 노력을 배가한다는 것이었다(Wickham 1999, 94). 그러나 이처럼 문민정부의 홀로서기를 통한 ‘정치적 안정의 실현’이라는 미국의 기대는 광주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사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최규하 대통령 및 문민정부의 사태해결 능력 결핍으로 인해 실망으로 귀결된다.

5) 신군부의 대북 도발책동에 대한 우려

위کم 사령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이 오히려 남한이 내부 불안으로 북침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남한에 의한 북침에 대비해 미국이 계속 한국에 주둔해 줄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Wickham 1999, 99-100). 위کم 사령관의 위와 같은 언급은, 자신은 만일 주한 미 사령부를 포함한 미국지도부가 12·12쿠데타 발생 시 쿠데타 세력에 대해 강압집압을 시도했다면 그에 따른 신군부세력에 의한 극한적 반항이 북침도발 유발행동으로까지 연결될 것을 우려했음을 시사한다. 거기에 더해 쿠데타 종료 이후라도 신군부세력이 역쿠데타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안위가 결정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는 대북 도발책동이나 이와 유사한 작위적 돌출행동을 할 것에 대해 신경 썼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미 권력을 불법으로 찬탈한 상황에서 분위기가 자신들의 권력구축에 반(反)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는 대외적 전쟁감행 불사 협박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카드는 미국 측에게나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압박력을 지닌 신군부로서는 효율성 있는 카드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남북 간 긴장국면 조성으로 당시 신군부세력은 자신들에게 쏠리는 비난의 눈길을 무마하고 국민적 관심을 희석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군부세력이 이러한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에 관한 언론보도를 흘려 긴장 조성 및 무력도발 가능성의 시위행위가 주한미지도부의 역 쿠데타계획 지원을 재고할 만큼의 동인이 되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6) 신군부에 대한 영향력 극대화 도모

미국은 12·12군사쿠데타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정통성 부재의 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한국군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했다(Wickham 1999, 87). 즉 신군부세력이 군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를 결여했다는 사실을 빌

미로 자신들과 신군부세력 간 관계 설정 과정에서 이점을 정치적 지렛대로 이용하려 했다. 카터행정부가 12·12군사쿠데타 전반을 이용하여 정치적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일찍이 예견되었고,³⁰⁾ 실제로 카터행정부는 신군부를 인정했을 경우 극대화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안했다(Wickham 1999, 93).

다른 한편, 신군부세력의 불법 쿠데타라는 원죄는 신군부세력이 미국에게 정통성을 구걸해야 하는 약자의 입장으로 전략하도록 만들었고, 미국으로 하여금 저자세의 신군부세력에 대해 비교우위의 유리한 입장을 구가하게 만들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불법 쿠데타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러한 약점을 지닌 집권세력의 취약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책 의도대로 길들이고 끌어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면도 없지 않았다³¹⁾. 위컴 사령관은 12·12 사태 이후 줄곧 이러한 분위기를 느긋이 즐기는 자세를 취하며 신군부세력에 대한 주도권을 향유하는 여유로운 태도로 일관했다(Wickham 1999, 84-88).

결론적으로 미국은 12·12군사쿠데타 발생을 전후하여 신군부세력을 현실로 받아들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쿠데타 이후 모 중장이 위컴 사령관을 찾아와 역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지원여부 의사를 타진했을 때 위컴 사령관은 단호한 태도로 ‘노(No)’라고 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글라이스틴 대사나 본국과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음도 아울러 고백한다(Wickham 1999, 78).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더 이상 현실을 역전시킬 만큼 사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상에 만족하고 신군부를 군의 실권세력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0) *The New York Times*, Dec. 16, 1979.

31) *The New York Times*, Dec. 16, 1979.

V. 병력통제권 관련 한미갈등과 신군부의 대미로비

12·12군사쿠데타 이후 한·미간에 가장 중요하게 불거진 문제는 쿠데타에 동원된 병력의 지휘통제권과 관련한 쟁점이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군 지휘권 내에 있는 병력이 지휘통제권이 무시된 채 법적 절차 없이 동원된 것에 대해 자신들의 권위와 연결지어 분개했다. 이점은 곧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신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고려하게 했다. 고려된 제재에는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와 직접적 경제적 제재가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은 3만 9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안보 전략적 이해(利害)가 얽힌 지역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군사적 제재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는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던 한국 일반인들에게까지 너무 많은 피해를 주어 반미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³²⁾ 따라서 미국은 절차상 하자를 내세워 불법으로 규정한 12·12군사쿠데타와 그 사태를 도모한 주역인 신군부세력에 대해 불법적 군권찬탈을 내세운 직접적 압박정책은 피했다.³³⁾

그리하여, 미국은 12·12쿠데타세력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는 대신 이 사태를 박 대통령 사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진 한국 국내정국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던 것이다. 즉, 신군부에 의해 재편된 군 질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려 했다.³⁴⁾ 그리고 신군부세력에게 직접적 제재를 가해 반발을 초

32) 이러한 인식은 미 국무성-주한 미대사관 사이 오고 간 전문과 윌리엄 글라이스틴 대사의 회고록에서 여러 번 언급된다.

33)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791219, Subject: Telegram from Professor Choi and Response;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Immediate, NODIS, 791219, Subject: Korean Focus - Amb. Kim (blank). 이 전문에서 미 국무성은 “……미국정부는 최근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해석을 공개적으로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김 대사에게 확신했다. 그러나 더 이상 ‘한국적 방식’으로의 군 사령부 변화가 생기는 것 또한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도 확신했다” 고 언급함으로써 사태의 더 이상의 변화를 원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34)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228, Subject: Second Look at December 12 Incident. *The New York Times*, Dec. 16, 1979.

래하는 결과를 가져와 많은 비용을 치르는 대신 불법적 군권찬탈 행위를 강조하며 이 점을 신군부세력에 대한 영향력 확대 모색의 계기로, 즉 신군부 ‘길들이기’에 활용코자 했다.

한편 신군부세력은 이러한 미국 태도에 대해 ‘박 대통령 살해사건 미국 연루설’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미국의 영향력 확대기도에 맞섰다.³⁵⁾ 사실 이 점에 대해 당시 글라이스틴 대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이 연루되지 않았음을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또 12·12직후 글라이스틴 대사와 전두환 합수부장과의 첫 회동에서도 전두환 장군은 제일 먼저 이 쟁점을 제기했고,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해명해야 하는 일종의 수모를 겪었다.³⁶⁾

더불어 미국 지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던 신군부세력은,³⁷⁾ 자신들의 군권탈취를 문제 삼는 주한 미 지도부에 대해 본국을 통한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맞섰다.³⁸⁾ 그들은 12·12사태는 박 대통령 살해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체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자신들의 행동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기에 적법했고,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따라서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언질로 미국을 설득해 나가려 했다.

우선 자신들을 압박해 들어오는 주한 미 사령관 위컴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전·현직의 장성들에게 로비를 벌였다.³⁹⁾ 자신들의 행동은 적법하였으며 자신들이 한국군부의 대세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했다. 위컴 사령관 등 주한미지도부가 자신들에게 취하는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미국 본국정부와 여론을 대상으로 설득하려 했다. 위컴 사령관

35)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NODIS, 791215, Subject: Korea Focus - Discussion with MG(Major General) Chun Tu Hwan.

36)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NODIS, 791215, Subject: Korea Focus - Discussion with MG(Major General) Chun Tu Hwan.

37) 존 위컴 및 윌리엄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에서 자주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다.

38)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Priority, 117573, NODIS, CHEROKEE, 800503, Subject: Self-Deception by ROK Military.

39) Telegram, Ibid, Subject: Self-Deception by ROK Military.

입장에서는 5·16군사쿠데타 직후 매그루더(Carter B Magruder) 사령관이 쿠데타를 끝까지 문제 삼다가 결국은 대세가 된 박 대통령 세력들에 의해 그가 경질된 사태가 답습될 형국이 벌어지고 있었다. 위컴 사령관은 이러한 사태진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Wickham 1999, 56).

또한 국내적으로 신군부는 당시 포레스터 중장과 같은 주한미군 지휘부에게 자신들이 군부의 주도세력임을 인정받으려 했다. 그리고 이들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을 현실적 대안으로 삼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신군부는 자신들에 대한 위컴 사령관의 경직된 처신을 비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입체적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스틸웰(Stilwell) 같은 퇴역장성을 통한 대미로비는 신군부의 이러한 노력의 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의 1980년 5월 방한은 언론에 보도되어 신군부세력에 대해 이러한 지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었다. 국무성도 주한미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내 이들의 방한 시 행적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지시했다.⁴⁰⁾ 또 전두환 신군부세력에 의한 주한미지도부 전방위 압박 작전에는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더불어 퇴역 미 장성들을 초청하여 현직 주한 미 사령관이 대(對)신군부 처신이나 방침에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노골적인 비난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위컴 사령관은 회고록에서 ‘미 고위장교’가 물론 포레스터 중장을 의미함을 여러 번 암시하고 있다.

신군부는 문형태 당시 국회국방위원장을 메신저로 이용하여 위컴 사령관 신변문제를 거론하면서 역쿠데타 세력에 대한 그의 지지 여부를 떠보는 한편, 그가 신군부 쿠데타세력을 확실히 지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신군부 세력은 위컴 사령관에 대한 온건한 포위 협박 전략으로 자신들에 대한 그의 지지를 확인받고 있었다. 한편 위컴 사령관은 이 루머에 대한 반응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다시 말해, 전두환 신군부세력과의 원활한 관계정립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변문제에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40)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Priority, 117573, NODIS, CHEROKEE, 800503, Subject: Self-Deception by ROK Military.

있다. 그러한 위기의식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을 감싸 안고 인정하려는 태도로 발전하였으며, 심지어는 역쿠데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단호함을 문 위원장에게 확인까지 해 주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측 간 확실한 딜(deal, 거래)이 전개되고 있고, 이 시점에서 12·12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미국의 지원을 통한 역쿠데타로 한국의 군부질서가 원상회복 될 수는 없었다.

VI. 결론

신군부세력이 군영으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역전되기에는 이미 그들이 현실적 대세가 되어있었다. 미국은 심지어 신군부세력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의 ‘전격성’에 대해 놀라기까지 했다.⁴¹⁾ 미국은 12·12군사쿠데타에 대해 신군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항의했지만, 전격적으로 군권을 쟁탈한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모습과 자신들이 신군부에 대해 강경대응함으로써 신군부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즉 공동의 이해관계를 재확인하고 타협과 양보로 협력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여론은 카터행정부의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서고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⁴²⁾. 뉴욕타임즈는 ‘한국사태에 통곡할 때’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 사태를 “박정희 독재의 전통을 계승할 결의에 찬 새로운 강자에 유리하게 결판난 것처럼 보인다”고 논평했다.

즉, 미국 여론은 카터행정부의 한국 국내문제에 대한 비개입 정책을 비난하며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이 이란화 되지 않으려면 미국의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카터행정부의 한국의 야당지도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조성돼 있었다. 이러한 여론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41)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213, Subject: Young ROK Officers Grab Power Positions.

42) *The New York Times*, Dec. 15, 1979.

때까지 카터행정부의 대한정책은 불개입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야당세력을 지지하는 태도도 그렇다고 12·12사태에 개입하는 자세도 취하지 않았다.

미국은 구두의 항의 이외에는 쿠데타 직후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개입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사태역전을 강력히 시도할 만큼 그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의 국내적 군권쟁탈 문제가 그들에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더 이상 현실을 역전시킬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사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 된다. 결국, 미국은 12·12군사쿠데타 발생을 전후하여 현상에 만족하고 신군부세력을 군의 실권세력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미국이 한국 국내 정국을 지켜볼 때 한국의 제 정치세력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군부는 그 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정치세력이었고, 또 그 군부세력 중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세력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으므로 -그것도 미국의 표현대로 전격적으로- 당연히 대세는 신군부에 기울게 되었다. 미국은 물론 객관적이고 중립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황적 조건으로 보아 결국 미국은 신군부를 지지한 결과가 되었다. 정권수행 능력이 있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힘 있는 조직, 거기에 더하여 친미 정향성을 띠고 있는 조직성향, 자신들의 동북아에서의 핵심이익인 안보·경제적 이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잠재력 등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불개입적 관망(wait and see)으로 한국군부를 주목했다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12·12군사쿠데타 이후의 미국의 대한정책은 10·26살해사건 직후와 마찬가지로 ‘불개입’이었다. 미국이 항변하는 불관여정책, 즉 ‘신중한 불개입’ ‘관망’은 신군부 병력이 특별한 저항 없이 상황을 종료하고 궁극적으로 쿠데타를 성공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한 것은 결국 ‘강자선택’의 결과가 되었다. 더불어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를 지향했고, ‘대세 편승적 승자 승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미 정부의 전문들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791207, Immediate, Subject: Politic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Priority, Subject: Weekly Status Report - Korea.
-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Immediate, NODIS, 791204, Subject: Korea Focus-Nudging ROK Political Leaders
-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Niact, Immediate, NODIS, 791218, Subject: Korea Focus: General Thoughts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NODIS 791218, Subject: My Meeting with Prime Minister (인쇄불량으로 확인 불가) December (인쇄불량으로 확인 불가).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NODIS, 791203, Subject: Korea Focus: Meeting with Martial Law Administrator Chung November 30.
-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791204, Subject: Politic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791204, NODIS, Subject: Korea Focus - Kim Tae-chung.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Washdc, Immediate, 791214, Subject: Need for Care in Characterizing December 12 Incident.
-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USDEL Secretaty Flash, White House Flash 0000, Amembassy Seoul Flash, 791212, Subject: Military Power Play in South Korea.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213, Subject: Younger ROK Officers Grab Power Positions.
-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Niact, Immediate, NODIS, 791218, Subject: Korea Focus: General Thoughts.
-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Immediate, NODIS, 791219, Subject: Korea Focus - Amb. Kim (blank.....).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791219, Subject: Telegram from Professor Choi and Response.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1859, NODIS, Subject: Initial Reflections on Post-Park Chung Hee Situation in Korea.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221, Subject: My December 20 Conversation with NDP President Kim Yong-Sam.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228, Subject: Second Look at December 12 Incident.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228, Subject: Korea Focus - Relations with ROK Military.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028, Subject: Initial Reflections on Post-Park Chung Hee Situation in Korea.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8001 (인쇄불량으로 확인 불가).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791218, Subject: Martial Law Commander States Goals of His Command: Lists of Things That Must Be Eliminated.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791219, Subject: Telegram from Professor Choi and Response
-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Immediate, NODIS, 791219, Subject: Korean Focus - Amb. Kim (blank)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NODIS, 791215, Subject: Korea Focus - Discussion with MG(Major General) Chun Tu Hwan.
-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Priority, 117573, NODIS, CHEROKEE, 800503, Subject: Self-Deception by ROK Military.
-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791213, Subject: Young ROK Officers Grab Power Positions.

2) 주요 일간지들

The New York Times, Nov. 10, 1979; *The New York Times*, Nov. 19, 1979; *The New York Times*, Dec. 4, 1979; *The New York Times*, Dec. 15, 1979; *The New York Times*, Dec. 16, 1979; *The New York Times*, Dec. 19, 1979; *The Washington Post*, Dec. 19, 1979.
동아일보, 1979/10/15; 1979/12/21; 1980/01/14, 1980/03/24, 1980/03/26, 1980/04/04, 1980/05/13, 1980/05/16, 1980/05/21.

3) 단행본 및 논문들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2· 12, 5· 18 실록』, 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7.
- 박원곤 (2010), “1979년 12.12 쿠데타와 카터 미 행정부의 대응: 도덕외교의 타협” 『국제정치논총』 50(4).
- 이삼성,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광주항쟁· 민족통일· 한미관계』, 서울: 한길사, 1993.

- Fowler, Jame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4, No. 2 (Summer, 1999).
- Gleysteen, William H, *Massive Entanglement, Marginal Influence: Carter and Korea in Cris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 Kamiya, Fuji, “The Korean Peninsula After Park Chung Hee,” *Asian Survey*, Vol 20, No. 7 (July. 1980).
-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London: Basic Books, 1997.
- Vance, Cyrus, “American Foreign Policy for the Pacific N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7, No. 3 (Winter, 1980~1981).
- Wickham, John A, *Korea on the Brink: From the 12/12 Incident to the Kwangju Uprising. 1979-1980*,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9.

4) 월간지

- 권영기, 1989. “전두환 경질 누가 알렸나”, 『월간조선』 (10).
『신동아』 1993. “문흥구 예비역중장의 증언.” (9).
『신동아』 1996. “12·12, 5·18 재수사 검찰수사기록.” (6).
『월간조선』 1993. (8).
『월간조선』 2005. (1) 별책부록. 『5·18 사건수사기록』.

투고일 : 2020년 3월 14일 . 심사일 : 2020년 3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4월 3일

* 신현익은 고려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다. 주요연구실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미국의 대한정책,” 등이 있다.

* 오영달은 영국 아버리스트위드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인권과 주권: 정치철학사상 그 상호관계에 대한 두 가지 전통” 등이 있다.

<Abstract>

The 12·12 Coup d'état of the New Military Faction in Korea and the U.S. Government's 'Wait-and-See' Policy in 1979

Shin, Hyun-Ick · Oh, Young-Dah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ight after the coup took place in Seoul on Dec. 12, 1979, the Carter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was alleged to maintain a policy of "non-intervention," contrary to the American public opinion, for fear of possible resistance from the chauvinistic Korean military and of a possible second Iranization of the Korean people. In this context, nobody was certain whether the United States was ready to pay the cost for its attempt to turn the tables here or whether the political leaders in Washington found it worthwhile to pay attention to the power struggle within the Korean military. This assumption leads naturally to the conclusion that the U.S. leaders apparently did not want to intervene in the political upheaval in Korea to such an extent as to further affect the reality.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seemed to have recognized the new Korean military leadership as the *de facto* power holders. It is evident that Washington took a "wait-and-see" approach to carefully watch the new military group in Korea, regarding it as a highly organized powerful group with the ability to take care of state affairs on its own, as a pro-Washington organization, and as a group with potential to safeguard and protect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Washington's decision to adopt a "non-intervention" policy, or a careful "wait-and-see" approach, turned out to be decisively conducive to the new military group in Korea putting an end to the upheaval without remarkable resistance and pulling off a successful coup in the end. Washington's "wait-and-see" approach resulted in supporting the stronger side in a situation where the new military leadership had no rival to compete with. Besides, it also seems that Washington sought to achieve the "largest effect with the minimum cost" based on the logic of "jumping on the bandwagon by rooting for the top dog." As it turned out, the United States toed the line for security and stability not to cause trouble by intervening in the upheaval in Korea.

Keywords : Dec.12 coup, new military, military junta, nonintervention
wait-and-see policy